

## 특별강연II

| 일시 2018년 10월 25일(목) 17:00 ~ 17:50 | 장소 컨벤션센터 (1F) 컨퍼런스홀



### 전 영 기

중앙일보  
논설위원겸  
칼럼니스트

## 탈원전 미신 몰아내고 신원전 + 신재생 두바퀴 나라로

### <탈원전은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

1. 탈원전은 독일 녹색당과 시민당의 정치 전략이다. 한국에 상륙하면서 미신으로 약화됐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상송배의 대상이고 어떤 다른 이들에게는 득표 수단이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밥벌이 비즈니스다.
2. 셋의 공통점은 공포 마케팅이 밑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불을 위해서 피하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 방법들을 찾아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한 게 과학문명의 발전사다. 남의 나라 사고를 보고 갑자기 위험을 느꼈다며 인류 최상의 과학기술을 매장시키겠다는 탈원전 세력은 난폭한 문명 파괴자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3. 문명 파괴자들은 반달처럼 반짝 번성할 순 있어도 지속 가능성은 없다. 미신 탈원전 세력은 머지 않아 소멸할 것이다.
4. 탈원전에 약간의 진실이 있다면 수십년간 쌓였던 원전 커뮤니티의 마피아, 기득권, 교만과 비밀성을 공격해 참혹한 패배감을 안김으로써 원전계를 반성케 하고 대중의 지지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 <어떻게 할 것인가>

5. 신재생은 정책으로 수용하되 탈원전은 정책이 아닌 미신임을 알리는 대중과 대화를 차고 넘치게 진행하자. 신재생+탈원전은 정책+미신의 최악의 조합이다. 결국 신재생+신석탄 시대로 돌아가고 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한다.
6. 독일은 탈원전의 나라로 자칭타칭 포장돼 있지만 진실은 신석탄의 나라일 뿐이다. 석탄 > 신재생 > 원자력의 순이다. 신재생의 불안정성을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으로 하여금 메우게 함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더러운 공기를 만들어 내는 나라가 되었다. electricity map 에서 프랑스,영국,독일의 더러운 공기 생산 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7. 독일이 쓰고 있는 탈원전의 나라라는 동화적인 가면을 벗기고 가장 더러운 공기 생산국이라는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것이 한국에 상륙한 탈원전 미신을 무력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8. 독일은 신재생에서 비롯되는 에너지 불안과 부족을 유럽 전력 교류망으로 구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에너지 고립국으로 전력을 팔고 살 인접국이 없다. 신재생+탈원전의 위험을 헛지할 환경이 돼있는 독일을 한국이 무턱대고 따라갈 수 없는 이유다.
9. 독일에서 탈원전이 시작된 것은 1979년 소련이 동독에 120기의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이에 대응해 서독도 같은 수의 미국 핵미사일을 배치하자 녹색당이 반미반핵 운동을 벌이면서였다. 녹색당은 이 운동을 주도해 독일 의회에 처음으로 의석을 갖게 됐는데 같은 반미좌파 성향의 시민당도 득표 전략상 반핵탈원전 노선을 뒤따르게 되었다. 86년 체르노빌 사건으로 좌파 진영은 불가역적인 반핵탈원전 자세가 확립됐고 2011년 후쿠시마 사건으로 기민당도 할 수 없이 끌려가게 됐다.
10. 메르켈 기민당 정권은 허구적인 신재생+신석탄 대신 경제성과 깨끗한 공기가 보장되는 신재생+신원전으로 사고자 하나 대연정(시민당)이나 소연정(녹색당)을 할 수 밖에 없기에 신원전으로 가는 길이 번번이 막히고 말았다.
11. 북한에 핵무기는 있으나 한국엔 미국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독일처럼 반미탈핵 운동을 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반미탈핵에 그것도 모자라 평화적인 원전마저 짓지말자고 하니 한국의 미신 세력은 독일의 녹색당 보다 더 터무니없고 막무가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기후변화의 권고>

12. 2018년 10월 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Global warming of 1.5°C- Summary for Policy makers'를 발표했는데 "(미래 에너지 소비가 늘 것으로 본 3번 경로일 경우)2030년에는 2010년에 비해 재생 에너지 발전이 315% 증가하고 원자력은 98% 증가할 것이다. 석탄은 75% 감소하고 가스는 33%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13. 이런 예측을 했으면 2100년까지 1.5도 감소라는 불가능스러운 목표 치 앞에서 전 세계의 탈석탄,탈화석을 위해 신재생+신원전 조합이 필요하다는 정책 권고를 ipcc가 각 국에 명확하게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기자 브리핑에서는 "이번 보고서는 원자력 평가 모델이나 경로를 포함하지 않았다. 원자력 국가 입장이나 정책이 다양해 각 국의 주권과 원자력 에너지를 추구하는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모호하게 피해갔다.
14. 신재생과 탈석탄만 주장하고 이 두 가지 동시 달성에 필요한 원자력에 대해선 유구무언한 것이다. 위선적인 탈원전 동맹국(예나하면 탈원전 한다면서 실은 신석탄 공화국이 됐기 때문)인 독일과 한국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짐작을 할 수 밖에.
15. 어쨌든 기후 변화와 대중의 요구, 기술의 진보 등을 감안하면 신재생을 막을 수 없고 신원전을 버릴 수 없다. 신재생+탈원전을 버리고 신재생+신원전으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불안한 신재생 외바퀴 노선 대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신재생+신원전 두 바퀴 노선으로!